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
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rehen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Safety Managers

김종인* · 최순영**
Jong-In Kim* · Soon-Young Choi**

Abstract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정액(직·간접) 84,074,030백만원으로 인적·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라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리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1. 서 론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수가 472,329명(사망 11,662명)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6,814,806백만원이며,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84,074,030 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1][2]

국내의 산업현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재해유형도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지만 법적인 규제의 완화, 경영자·근로자의 인식부족, 작업환경에 개선에 따른 투자비용의 감소, 안전 불감증 등의 요인으로 알 수 있다.[3]

국내의 경제 여건이 달라지는 현실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변화도 예외는 아니었고, 19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축소 및 안전관리자 겸임확대 등 안전관리 제도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5]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11,011개소(48.6%)이며, 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11,625개소(51.4%)로 사업장 자체선임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으나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들이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되어 있으나 총무부서, 공무부서 등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안전업무의 전문성과 법령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직무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실태 및 산업안전정책 방향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 정책 방향 이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안전관리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집락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235명 이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24명을 제외한 21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 환경 특성,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는 n과 %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 방향 차이, 안전관리자의 근무환경 특성에 따른 산업

안전정책 방향 차이는 χ^2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근무 기업체 특성은 <표 1>와 같다.

지역별로는 고용노동부의 6개청 단위별로 서울청 53명(25.1%), 중부청 71명(33.6%), 대전청 26명(12.3%), 광주청 22명(10.4%), 부산청 11명(5.2%), 대구청 28명(13.3%)으로 중부청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35명(64.05%), 전기, 가스, 수도업 12명(5.7%), 서비스업 16명(7.6%), 운수업, 창고, 통신업 27명(12.8%), 기타 21명(10.0%) 순으로 제조업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회사규모는 99명 이하 54명(25.6%), 100명 이상 299명 이하 84명(39.8%), 300명 이상 499명 이하 25명(11.8%), 500명 이상 999명 이하 10명(4.7%), 1000명 이상 38명(18.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조설립 여부는 ‘예’ 147명(69.7%), ‘아니오’ 64명(30.3%)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		n	%
지역	서울청	53	25.1
	중부청	71	33.6
	대전청	26	12.3
	광주청	22	10.4
	부산청	11	5.2
	대구청	28	13.3
업종	제조업	135	64.0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2	5.7
	서비스	16	7.6
	운수, 창고, 통신업	27	12.8
	기타	21	10.0
회사 규모	99명 이하	54	25.6
	100~299명	84	39.8
	300명~499명	25	11.8
	500명~999명	10	4.7
	1000명 이상	38	18.0
노조설립 여부	예	147	69.7
	아니오	64	30.3
Total		211	100.0

3.2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표 2>와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84명(62.2%),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2명(100.0%), 서비스업 11명(68.8%), 운수, 창고, 통신업 26명(96.3%), 기타 17명(81.0%)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산업안전정책 방향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회사규모의 경우 종업원 수가 99명 이하일 경우 28명(51.9%), 100~299명 55명(65.5%), 300~499명 21명(84.0%), 500명~999명 10명(100.0%), 1000명 이상 36명(94.7%)으로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기업체 특성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Total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4(83.0)	9(17.0)	53(100.0)
	중부청	46(64.8)	25(35.2)	71(100.0)
	대전청	18(69.2)	8(30.8)	26(100.0)
	광주청	16(72.7)	6(27.3)	22(100.0)
	부산청	8(72.7)	3(27.3)	11(100.0)
	대구청	18(64.3)	10(35.7)	28(100.0)
업종	제조업	84(62.2)	51(37.8)	135(10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1(68.8)	5(31.3)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6(96.3)	1(3.7)	27(100.0)
	기타	17(81.0)	4(19.0)	21(100.0)
회사규모	99명 이하	28(51.9)	26(48.1)	54(100.0)
	100~299명	55(65.5)	29(34.5)	84(100.0)
	300명~499명	21(84.0)	4(16.0)	25(100.0)
	500명~999명	10(100.0)	-	10(100.0)
	1000명 이상	36(94.7)	2(5.3)	38(100.0)
노조설립	예	104(70.7)	43(29.3)	147(100.0)
	아니오	46(71.9)	18(28.1)	64(100.0)
Total		150(71.1)	61(28.9)	211(100.0)

3.3 기업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 차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는 <표 3>과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 차이는 제조업 114명(84.4%), 전기·가스, 수도업 12명(100%), 서비스업 10명(62.5%), 운수,창고,통신업 25명(92.6%), 기타 10명(47.6%)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 설립 여부에 따른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는 노조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 139명(92.5%)로 정보에 대한 자료 확보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에 대한 차이

기업체 특성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Total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0(75.5)	13(24.5)	53(100.0)
	충부청	58(81.7)	13(18.3)	71(100.0)
	대전청	20(76.9)	6(23.1)	26(100.0)
	광주청	18(81.8)	4(18.2)	22(100.0)
	부산청	10(90.9)	1(9.1)	11(100.0)
	대구청	25(89.3)	3(10.7)	28(100.0)
업종	제조업	114(84.4)	21(15.6)	135(10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0(62.5)	6(37.5)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5(92.6)	2(7.4)	27(100.0)
	기타	10(47.6)	11(52.4)	21(100.0)
회사규모	99명 이하	42(77.8)	12(22.2)	54(100.0)
	100~299명	67(79.8)	17(20.2)	84(100.0)
	300명~499명	23(92.0)	2(8.0)	25(100.0)
	500명~999명	9(90.0)	1(10.0)	10(100.0)
	1000명 이상	30(78.9)	8(21.1)	38(100.0)
노조설립	예	136(92.5)	11(7.5)	147(100.0)
	아니오	35(54.7)	29(45.3)	64(100.0)
Total		171(81.0)	40(19.0)	211(100.0)

3.4 기업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도 차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이 없어도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 차이는 <표 4>와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7명(64.4%), 전기·가스, 수도업 12명(100%), 서비스업 13명(81.3%), 운수, 창고, 통신업

26명(96.3%), 기타 17명(81.0%)으로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규모의 경우 99명 이하일 경우 27명(50.0%), 100~299명 62명(73.8%), 300~499명 20명(80.0%), 500명~999명 10명(100.0%), 1000명 이상 36명(94.7%)으로 회사규모가 클수록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기업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도 차이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6(86.8)	7(13.2)	53(100.0)
	충부청	48(67.6)	23(32.4)	71(100.0)
	대전청	20(76.9)	6(23.1)	26(100.0)
	광주청	17(77.3)	5(22.7)	22(100.0)
	부산청	8(72.7)	3(27.3)	11(100.0)
	대구청	16(57.1)	12(42.9)	28(100.0)
업종	제조업	87(64.4)	48(35.6)	135(10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3(81.3)	3(18.8)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6(96.3)	1(3.7)	27(100.0)
		17(81.0)	4(19.0)	21(100.0)
회사규모	99명 이하	27(50.0)	27(50.0)	54(100.0)
	100~299명	62(73.8)	22(26.2)	84(100.0)
	300명~499명	20(80.0)	5(20.0)	25(100.0)
	500명~999명	10(100.0)	-	10(100.0)
	1000명 이상	36(94.7)	2(5.3)	38(100.0)
노조설립	예	109(74.1)	38(25.9)	147(100.0)
	아니오	46(71.9)	18(28.1)	64(100.0)
Total		155(73.5)	56(26.5)	211(100.0)

3.5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 방향 차이

3.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인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는 <표 5>와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31명(58.5%), 31~40세 43명(58.9%), 41~50세 52명(91.2%), 51세 이상 24명(85.7%)으로 41~50세 이상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 전담은 74명(77.1%), 겸직은 76명(66.1%)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경력으로는 1년 미만 36명(76.6%), 1~3년 미만 20명(55.6%), 3~5년 미만 26명(54.2%), 10~20년 미만 45명(81.8%), 20년 이상 23명(92.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23명(67.6%), 환경안전팀 50명(59.5%), 시설팀, 공무팀 31명(77.5%), 생산팀 9명(81.8%), 품질부서 1명(33.3%), 기타 36명(92.3%) 순으로 환경안전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예	아니오	
연령	21~30세	31(58.5)	22(41.5)	53(100.0)
	31~40세	43(58.9)	30(41.1)	73(100.0)
	41~50세	52(91.2)	5(8.8)	57(100.0)
	51세 이상	24(85.7)	4(14.3)	28(100.0)
선임	자체선임(전담)	74(77.1)	22(22.9)	96(100.0)
	자체선임(겸직)	76(66.1)	39(33.9)	115(100.0)
직위	사원	56(74.7)	19(25.3)	75(100.0)
	대리~과장	46(61.3)	29(38.7)	75(100.0)
	차장	30(78.9)	8(21.1)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4(82.4)	3(17.6)	17(100.0)
	기타	4(66.7)	2(33.3)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36(76.6)	11(23.4)	47(100.0)
	1~3년 미만	20(55.6)	16(44.4)	36(100.0)
	3~5년 미만	26(54.2)	22(45.8)	48(100.0)
	10~20년 미만	45(81.8)	10(18.2)	55(100.0)
	20년 이상	23(92.0)	2(8.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23(67.6)	11(32.4)	34(100.0)
	환경안전팀	50(59.5)	34(40.5)	84(100.0)
	시설팀, 공무팀	31(77.5)	9(22.5)	40(100.0)
	생산팀	9(81.8)	2(18.2)	11(100.0)
	품질부서	1(33.3)	2(66.7)	3(100.0)
	기타	36(92.3)	3(7.7)	39(100.0)
Total		150(71.1)	61(28.9)	211(100.0)

3.5.2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는 <표 6>과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30명(56.6%), 31~40세 45명(61.6%), 41~50세 23명(40.4%), 51세 이상 15명(53.6%)으로 31~40세 이상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경력으로는 1년 미만 14명(29.8%), 1~3년 미만 26명(72.2%), 3~5년 미만 32명(66.7%), 10~20년 미만 32명(58.2%), 20년 이상 9명(36.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16명(47.1%), 환경안전팀 54명(64.3%), 시설팀, 공무팀 20명(50.0%), 생산팀 8명(72.7%), 품질부서 2명(66.7%), 기타 13명(33.3%) 순으로 환경안전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있다	없다	
연령	21~30세	30(56.6)	23(43.4)	53(100.0)
	31~40세	45(61.6)	28(38.4)	73(100.0)
	41~50세	23(40.4)	34(59.6)	57(100.0)
	51세 이상	15(53.6)	13(46.4)	28(100.0)
직위	사원	36(48.0)	39(52.0)	75(100.0)
	대리~과장	44(58.7)	31(41.3)	75(100.0)
	차장	22(57.9)	16(42.1)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1(64.7)	6(35.3)	17(100.0)
	기타	-	6(100.0)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14(29.8)	33(70.2)	47(100.0)
	1~3년 미만	26(72.2)	10(27.8)	36(100.0)
	3~5년 미만	32(66.7)	16(33.3)	48(100.0)
	10~20년 미만	32(58.2)	23(41.8)	55(100.0)
	20년 이상	9(36.0)	16(64.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16(47.1)	18(52.9)	34(100.0)
	환경안전팀	54(64.3)	30(35.7)	84(100.0)
	시설팀, 공무팀	20(50.0)	20(50.0)	40(100.0)
	생산팀	8(72.7)	3(27.3)	11(100.0)
	품질부서	2(66.7)	1(33.3)	3(100.0)
	기타	13(33.3)	26(66.7)	39(100.0)
Total		113(53.6)	98(46.4)	211(100.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는 지역, 업종, 규모, 노조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제조업 62.2%로 다른 업종보다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는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산업안전정책 방향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회사규모의 경우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은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이 없어도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는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회사규모가 클수록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

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 정책 방향 이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안전관리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 참 고 문 헌

-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12.
-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6~2010.
- [3] 갈원모, 김종배, 남현우, 최상복(2001). 안전관리자 직무분석과 효율적 교과목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3(3). pp33-44.
- [4] 권영국(2000), 한국산업안전관리자의 실태조사와 비교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2(3). pp89-100.
- [5] 김현영, 장승희, 고병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6] 백중배외, 위험요인자기관리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7] 장석진(2010), 제조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 [8] 전용일 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수요예측 및 서비스 전달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 2010.
- [9] 전원일 외, 산업재해와 근로손실 분석, 한국경제연구, 2011.